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

2022. 8. 17.

대 통 령 실

순 서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1
2. 제왕적 권력을 내려 놓았습니다 2
3.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3
4. 비상식적인 소주성을 폐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정상화했습니다 6
5.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8
6.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습니다 10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12
8.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 13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6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17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공간’과 ‘형식’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끝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 5월 10일 개방된 이후 8월 15일까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는 835만여 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명소가 되었습니다.
-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고
다음 세대에게 천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 마련 예정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시도해왔지만
어느 정부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는 해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은 역대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30여년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

☐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으로 지켰습니다.

- 도어스테핑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임으로써
신비주의에 쌓여있던 대통령 문화를 친근하게 바꿨습니다.

※ 지난 5.10 취임 후 현재까지(~8.16) 총 36회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128개의 기자 질문에 답변

2. 제왕적 권력을 내려 놓았습니다

-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 대통령은 취임 후,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했습니다.
-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범부처 · 범국가적 현안 기획 · 조정 · 추진,
민생과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 (기존) 3실장 8수석 2보좌관 2차장 → (개편) 2실장 5수석 2차장
☞ △장관급(실장) 1명 △차관급(수석 · 보좌관) 5명 감축

- 특히,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 민정수석의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민정 · 공직기강 · 법무 · 반부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검증은 물론 5대 사정기관(검찰 · 경찰 · 국정원 · 국세청 · 감사원)을 통제했습니다.
- 지금의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더 이상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전문가(인사혁신처 출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의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상화했습니다.

3.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 우리의 국정 기조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확고한 연대 하에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 무너진 한미동맹을 취임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재건하고,
굳건한 혈맹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한미 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첨단산업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여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 유명무실하던 한미 연합연습은 정상화되었습니다.

□ 대통령은 NATO 창립 73년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 한미일 3국과 정상회담, 아태파트너 4개국과 정상회담,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적극적인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 원전(폴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방산(폴란드),
반도체·공급망(네덜란드, 캐나다), 신재생에너지(덴마크) 등의 분야에서도
국익증진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악화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 한일관계는 지난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 지난 정부는 그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항 이행을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파기했고, 임기 말에 이르러 국가간 합의라고 인정했으나 일본은 양국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 일본 외무대신은 주일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임기내내 거절했으며 수교이래 양국간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보내 전·현직 총리와 외상 등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일본과의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협의단이 만난 기시다 총리, 아베 前 총리, 하야시 외무대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양국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 취임 후에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환담했고(6.28), 한미일 정상회의(6.29),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회의(6.29)를 통해 일본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 장기간 짝 막혔던 양국 국민간 교류의 물꼬를 텃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6.29)했고 일시 중단되었던 상호 비자면제조치 복원도 검토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 일본은, 우리와 함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이웃으로서 이제 한일 양국은 함께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안보주권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 자산을 배치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했습니다.
-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흔들림없이 우리의 외교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세계의 자유세력과 연대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국가 대한민국의 핵심 덕목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고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7.19)했습니다.
- 최근 방한(8.12)한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과거 정부에서 은폐했던 진실을 밝히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웠습니다.

-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20.9), 북한 어민 강제북송(‘19.11)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숨졌던 사건들의 진상을 공개했습니다.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비상식적인 소주성을 폐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정상화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이념 중심 정부주도 정책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했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재정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없습니다.
 - 경제정책에 이념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먼저 과감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로봇,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 7월말 기준, 정부는 총 1,004건 규제개선 과제 관리 중으로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 완료,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 이행 중

* 자율주행 로봇 인도주행 허용,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허용 등

- 지난 5월, 기업들이 약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로봇, 환경 관련 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7.28)하여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기업투자**를 지원했습니다.

* 5월말까지 11개 기업이 1,060조원대 투자 계획 천명

< 기업투자 애로 해소 사례 >

- ✓ 자동용접 협동로봇 이동로 올타리 설치 등 간소화 → 현대중공업 스마트 조선소 구축 투자(3,200억원)
- ✓ 생분해성 플라스틱 집중 활용분야 등 기준정비 → 롯데케미칼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1조원)

-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세제를
민간·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7.21)을 추진하였습니다.
 -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최고세율 인하 25→22%)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자본이 다음 세대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가 정신과 경제활력을 되살려내겠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7.21) >

- ✓ **(경제활력 제고)** △법인세율·과표구간 조정 등 기업경쟁력 제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 ✓ **(민생안정)** △소득세 하위 2개구간 과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0→2.4억미만) 및 최대지급액 10% 확대 △주거·교육·양육비 등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방만했던 재정을 건전기조로 전환하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맵습니다.

-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7.7)에서
지난 정부의 재정만능주의와 단절을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 등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5.47%)하고, 주거비 지급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의 46%→47%)와 교육비 단가 인상(+23.3%) 결정(7.29)

- 그동안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7.27)

-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 : 현재 629개 위원회 중 약 200개 감축

5.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 지난 5월 정부 출범 당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충격과 함께
최근 수년간의 방만한 재정지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6.15)하고,
종합적·체계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매주 직접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7.8일 이후 5회 개최)를 개최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의 건전기조 전환 등
거시적 대응과 함께
공급망 단계별 비용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등 미시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주력했습니다.

- 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
에너지바우처(0.25조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일반지출 기준 39조원*)을 긴급 편성하고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례보증·융자지원(13조원),

맞춤형 채무조정(30조원) 프로그램도 가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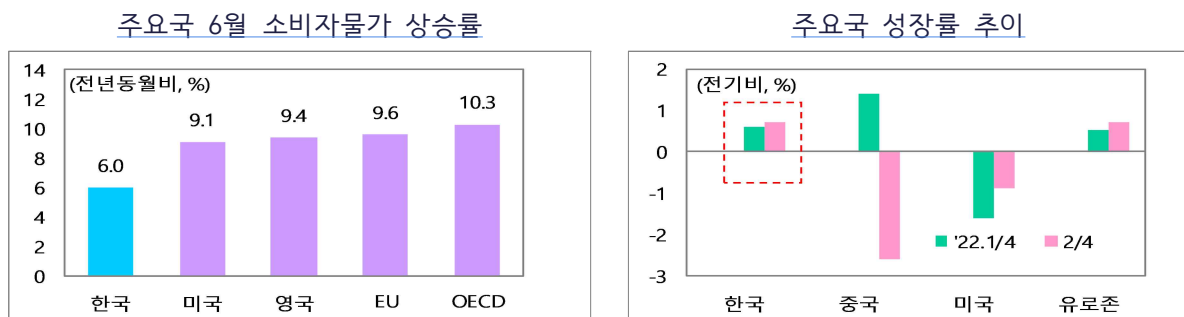
* 추경 총 규모 62조원 중 지방이전 재원 23조원을 제외한 금액

○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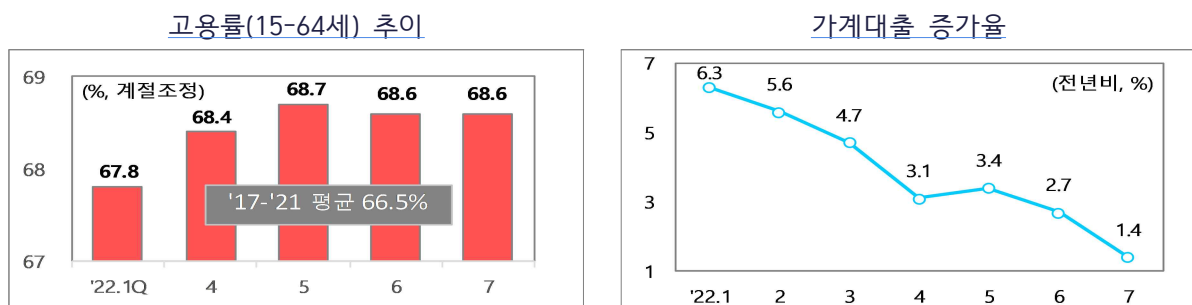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요국과 대비하여 물가상승폭이 작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6.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습니다

□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한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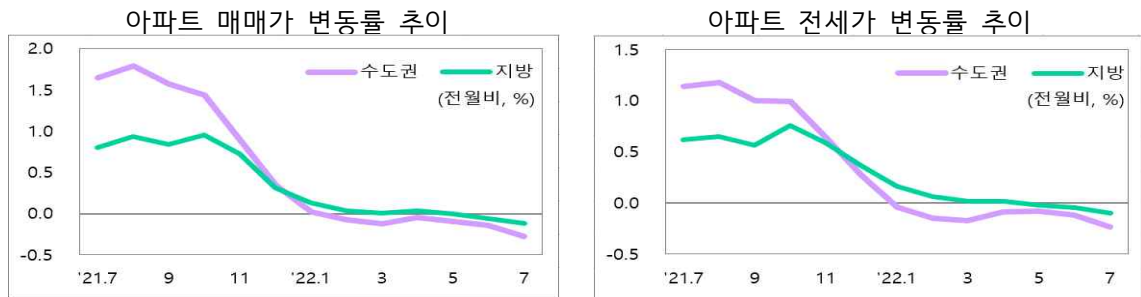
□ 먼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

청년의 내집마련 희망을 막는 대출 규제,

민간의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5.10)하였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정상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바로 잡았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완화(60~70→80%)하고,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하였습니다.
-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습니다. 재건축 등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혁파하고, 리츠, 신탁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270만호 공급방안(8.16)도 마련했습니다.
- 수급 양 측면의 규제 합리화 조치에 더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던 임대차법 개정 논의도 시작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집값과 전세값 모두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응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등 전세 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들이 다시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표(8.16)하는 등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외면한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등을 통해 '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유망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은 없습니다.

※ 국내 원전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2020년 매출 26%, 수출 73%, 인력 14% 감소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도록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사위기에 처한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일감을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2년에 1,300억원,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추가 일감을 공급
정책자금 500억원 추가, 특례보증 500억원 신설 등 총 1,000억원 긴급 금융자금 제공

- 멈춰섰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에 다시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 신한울 3,4호기는 '24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

-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NATO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체코, 폴란드 등 유망 국가 대상 수주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을 목표로 범부처 「원전수출 전략추진위원회」 발족(8월)

- 친환경 에너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게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8.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더 빠른 도약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을 주도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양성, 규제개혁,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산업별 전략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우선,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입니다.

- 반도체 기술은 美·中 패권경쟁 속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과제입니다.
- 지난 정부 시절 발표된 반도체 육성 대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하였고
가장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수준별 융합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7.19)하였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 낼
핵심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투자 지원 확대,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전고한 소부장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마련(7.21)하였습니다.

< 반도체 관련 대책 주요 내용 (7.21) >

- ✓ (기업투자 지원) △용적률 상향 등 규제특례 허용 △신속 인허가 지원 △투자세액공제
혜택 강화 △환경(화학물질)·노동(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 ✓ (인력양성) 대학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등 민간 주도의 협력 강화
- ✓ (시스템반도체)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팹리스 지원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 ✓ (소부장생태계) △'시장선도형' R&D 확대 △클러스터화 지원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첨단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 누리호가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우리 독자 기술을 자랑하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6.21).

300여 개의 국내기업이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민간 중심 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이로써 대한민국은

1.5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도

1년여의 도전적 임무 수행에 돌입(8.5)했습니다.

다누리는 우주인터넷 등 우리 손으로 개발한 장비 5종과
NASA 극지방 촬영 카메라를 싣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와 자원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7.6)했습니다.

-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산업(전남), 위성산업(경남)의

삼각체제 구축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자원강국·경제강국·안보강국에 도전하기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7.27)을 마련하여
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개발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합니다.
- AI 등 혁신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現 390일 → 80일) 하고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의료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디지털 경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최근 사이버인력의 수요 증가(매년 6.5%)와
사이버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4만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인력의 양적 확대와 최정예 인재 양성 등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 인력과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DEFCON, 8.11~14))에
국내 화이트해커(BoB) 출신 30여명이 출전하여
한·미·캐나다 연합팀이 우승을 거두었고
한국 단독팀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 군 전문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관의 사이버 합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7.27)했습니다.
 - K2전차와 K9자주포, FA-50경공격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 NATO 정상회의에서 만들어 낸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수출 성과입니다.
- 호주와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8.4)을 통해
‘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호주로 장갑차 수출을,
노르웨이로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보라매가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7.19)했습니다.
 -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자적 우리 기술을 더욱 축적해
초음속 전투기 분야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이제는,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 법과 원칙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노사관계에 원칙없이 개입하여
불합리한 타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원칙** 속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과거 정부 비교시 파업건수·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공생의 노사분위기 확산 추세

〈표〉 기간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비교

취임 첫해(5.10-8.9)	盧('03)	李('08)	朴('13)	文('17)	尹('22)
노사분규건수(건)	92	49	20	37	31
근로손실일수(일)	683,649	314,260	110,769	109,150	60,388

□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